

# 부산환경단체 “낙동강하구 국가공원 조성하라”

올해 환경 10대 의제 발표, 동남권 대기환경청 등 요구

국제신문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입력 : 2020-01-09 22:34:53 | 본지 1면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자.”

부산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환경회의가 9일 부산시청 앞에서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포함한 올해 10대 환경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에는 ▷미세먼지 없는 부산,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도시 부산 ▷부산 맑은 물 확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 ▷대저대교 등 낙동강 하구 난개발 중단 ▷금산 국립공원 지정 ▷생물 다양성 도시 부산, 자연과 인간 공존의 도시 부산 ▷부산 강·하천 생태복원, 물순환 도시 부산 ▷바다 살리기 플라스틱 제로 범시민 운동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낙동강이 흐르는 강서구 둔치도, 맥도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이대영 그린볼런티어위원장은 “낙동강 하구 국가공원 지정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시행에 맞춰 부산의 녹색 영토를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낙동강 하구는 부산 내 남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대규모 평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어서 국가공원 대상지로 충분하다”며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지정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구슬 부장은 “서울 경기 등에서는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 중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항만은 해양수산부, 노후 트럭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답변만 반복한다. 그 사이 시민은 미세먼지의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는 “전진하지 못했던 환경문제가 사안별로 적절하게 정리됐다. 근본 대책을 실행해 ‘맑고 밝은’ 부산을 만들자”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 연합체인 부산환경회의는 지난해 시민활동가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활동 의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10대 의제를 뽑았다. 부산환경회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정리해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